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4월 27일

제07-22호

북핵과 북·중 경제관계 전망

조 명 철 동북아경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장 (mjcho@kiep.go.kr, Tel: 3460-1185)

정 승 호 동북아경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two@kiep.go.kr, Tel: 3460-1055)

주요 내용

- 과거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북핵문제의 진전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이러한 과거의 특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

 -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로 촉발되었던 1차 북핵위기 당시 북·중무역은 전년대비 29.2%의 증가를 보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핵 및 미사일 위기가 수차례 있었으나 북·중 경제관계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음.
 - 그러나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고 이로 인해 두 나라 사이의 전반적인 경제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음.
 - 최근에는 6자회담에서 북핵 관련 2·13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점차 풀리기 시작하였으며 북·중간 경제교류와 투자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북·중 경제관계가 과거와 달리 북핵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은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나, 반대로 북핵 해결이 진전될 때 북·중 경제관계가 급격히 증대되는 것은 두 나라의 혈맹적 유대관계가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 향후 북핵문제가 원만히 타결될 경우, 중국정부는 핵 포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 개발전략까지 고려하여 비교적 큰 폭의 대북 개발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임.
- 우리는 심화되어 가는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북핵 폐기를 전제로 남북협력을 보다 적극화할 필요가 있음.

1. 북·중 경제관계 현황

가. 무역

- 2006년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4억 6,772만 달러로 2005년 대비 5.8% 감소한 반면, 수입은 12억 3,189만 달러로 13.6% 증가하였으며, 무역총액은 16억 9,960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7.5% 증가하였음.
- 무역증가율은 7.5%로 최근 3년 평균 무역증가율 20%에 비하면(2003년 38.6%, 2004년 35.4%, 2005년 14.9%) 그 증가세가 크게 약화된 것임.

표 1. 북·중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4	582	47.2	795	26.5	1,377	34.5	-213
2005	497	-14.7	1,085	36.5	1,582	14.9	-588
2006	468	-5.8	1,232	13.6	1,699	7.6	-764

자료: 무역협회(www.kita.net)

-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여전히 철광석, 석탄 등 1차 생산품 위주의 수출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의류 수출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3위의 수출품목이 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
- 어패류의 수출액이 50% 이상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감소를 주도하였는데, 이는 어패류의 수출단가 하락과 어획량 감소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됨.

표 2. 2006년도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코드	품목명	2005년	2006년	
			금액	금액	증가율
1	26	광, 슬랙, 회(철광석)	92	118	28.3
2	27	광물성연료(석탄)	112	102	-8.8
3	62	의류(편직물 제외)	58	63	8.6
4	03	어패류(오징어, 조개)	92	43	-53.2
5	72	철강(철 스크랩)	72	35	-51.1

자료: 무역협회(www.kita.net), () 안은 주요 세부품목임.

-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연료, 철강, 기계류 등 산업자재와 육류, 플라스틱류 등 생필품 위주로 2006년에도 큰 변화가 없었음.

표 3. 2006년도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05년	2006년	
			금액	금액	증가율
1	27	광물성연료(원유)	286	347	21.6
2	02	식용육류(돼지고기)	104	112	7.3
3	85	전자기기(램프, TV)	57	98	72.5
4	84	기계류	77	83	7.8
5	39	플라스틱	52	52	-0.3

자료: 무역협회(www.kita.net), () 안은 주요 세부품목임.

- 2006년 7월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북·중 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무역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이 실행한 대북 금융거래 제한, 통관 절차 강화 등의 경제제재 조치는 그 효과가 미미하였던 것으로 분석됨.

나. 투자

1) 중국의 대북 투자

- 2002년 7·1조치 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비즈니스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대북 투자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중국 대북 투자의 상당 부분은 2005년과 2006년 상반기에 집중되었음.

표 4. 중국의 연도별 대북 투자 실행액

(단위: 천 달러)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6월)
투자액	2,600	1,503	3,626	8,998	53,690	58,740
건수	2	4	5	8	13	14

자료: 『중국상무연감』 각년호; 2005년과 2006년 상반기 통계는 구진성(谷金生) 북한주재중국대사관 경제참사의 발표자료 인용(『연합뉴스』, 2006. 9. 4).

- 중국기업들은 2002년 이후 북한내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자원 개발 및 기반시설, 유통업, 제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2006년 상반기에는 2005년 전체 투자액보다 많은 실적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북한의 미

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 경제제재가 발동되고 대북 투자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중국기업들이 대북 투자를 대부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됨.

2) 북한의 대중 투자

- 2005년까지 중국 상무부에 투자계획을 신고(등록)한 북한기업 수는 443개이며, 이 가운데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 200개 이하일 것으로 추정됨.¹⁾
 - 투자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것은 10건 미만이며, 최대 규모의 투자도 1천만 달러를 넘지 않고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함.
 - 2005년까지 북한의 대중 투자액 누계는 계약액이 2억 5천만 달러, 실제 투자액 9,400만 달러로서, 중국은 북한의 최대 투자대상국임.
 - 2005년 1년간 투자계약은 38건으로 2,800만 달러이나, 실제 투자액은 130만 달러로 파악됨.²⁾
- 북한의 주요 대중 투자지역은 동북3성, 북경, 상해 및 광둥 등이며, 특히 중국의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지역에 북한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음.
 - 동북지역에 북한기업이 많은 주요 이유는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성, 다수의 조선족 거주, 한국기업 및 관광객을 겨냥한 것 등임.
 - 동북3성지역에는 100여개의 북한 무역회사들이 △단둥, 대련, 심양 등 요녕성지역과 △연변을 중심으로 한 길림성 각 지역 △흑룡강 하얼빈 등지에서 영업 중임.
 - 이밖에도 동북지역에는 식당업과 민간예술품 가공분야의 진출이 활발한 편이며, 최근에는 의류, 김치공장 등 가공업과 IT산업의 진출도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중국 남부지역에도 식당과 은행, 무역상사 등 다수의 북한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1) 중국 상무부 자료

2) 중국 상무부 자료

다. 원조

- 2006년도 중국의 공식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북 무상원조액은 3,700만 달러로 한국의 원조액³⁾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표 5. 연도별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실적

(단위: 천 달러, %)

연도	금액	증감률
2002	15,968	-76.9
2003	10,888	-31.8
2004	14,556	33.7
2005	38,123	161.9
2006	37,375	-2.0

자료: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PRC)』

- 중국의 대북 원조품목은 주로 구체적인 품목 파악이 어려운 미분류 및 기타교역품(HS 9801)이 전체의 40%에 가까움.

- 두 번째 원조품목은 기계·전자류로 주로 컴퓨터(HS 8740)와 관련된 장비인 것으로 파악됨.

표 6. 2006년도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주요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명	금액
1	특수교역 미분류	14,291
2	기계류, 전자전기	10,181
3	식물성 생산품	7,454
4	비금속	2,897
5	화공제품	921

자료: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PRC)』

- 그러나 중국의 대북 원조 중에는 교역채무 변제, 차관 제공, 비공개적인 원유·식량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규모가 공식적인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음.

2. 북핵 해결과정에서 북·중 경제관계 변화 전망

- 3) 2006년도 한국의 대북 무상원조 총액은 2억 7,400만 달러로, 정부지원 1억 9,300만 달러, 민간 지원 8천만 달러가 이루어졌음(통일부 통계).

가. 무역

-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에 합의함으로써 북·중 무역 활성화를 위한 호혜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나, 양국간 무역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상존하고 있어 무역규모의 획기적 증대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북·중 무역의 증가요인으로는 △대북 금융제재 해제와 통관절차 완화에 따른 교역 원활화 △중국의 대북 투자 및 지원 증가로 인한 관련품목 수입 증가 △위탁가공무역 증가 △북한경제난 해소 노력에 의한 원자재 구입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 첫째, UN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단둥을 중심으로 실행하였던 대북 금융제재와 통관절차 강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무역거래가 원활화됨에 따라 무역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단둥의 광선은행⁴⁾은 중국 건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2006년 10월을 전후하여 영입이 정지된 바 있으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에 맞물려 2006년 11월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송금업무가 재개되었으며 현재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금도 가능하게 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북한 수입·수출 물품에 대한 △통관물품 전수검사 △통제품목 확대 등 강화되었던 교역제한 조치들도 제재 이전 수준으로 완화된 것으로 확인됨.
 - 2007년 1~2월 북·중 무역통계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양국간 무역총액은 3억 5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3.6%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음.

표 7. 2007년 1~2월 북·중 무역 현황

(단위: 천 달러, %)

대중 수출		대중 수입		무역총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23,645	54.7	228,150	24.4	351,795	33.6

자료: 무역협회(www.kita.net)

- 둘째, 북핵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중국기업의 대북사업 리스크가 감소하고 중국정부의 대북 지원 여건도 조성되어, 민간과 정부부문 모두에서 대북 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대북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부분의 주요 투자대상인 광산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운송, 채취와 관련된 장비 및 기자재의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중국 건설은행과 북한 무역은행(북한정부의 대외결제 은행)의 합작은행으로, 단둥지역내 북한과 거래하는 대부분의 중국기업들은 대북 송금업무를 광선은행을 통하여 했기 때문에, 광선은행에 대한 업무중지는 사실상의 대북 송금금지 조치라 할 수 있었음.

- 또한 동북3성 개발전략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유경제개혁 추진으로 동북3성내 국유기업의 합병·파산이 가속화되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희설비들의 대북 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정부 차원에서도 북한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관련 건설장비와 물자의 대북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셋째, 북한의 의류 위탁가공을 통한 대중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6년도 북한의 대중 주요 수출품을 HS Code 4단위 기준으로 보면 수산물의 수출은 급격히 감소한 데 비해, 위탁가공을 통해 수출된 여성의류, 남성의류 등이 5대 품목으로 진입함.
- 넷째, 북한이 2007년도 신년사설에서 금년도 북한의 최고 과제가 '경제사업'으로 제시된 만큼 산업생산 증대를 위한 원부자재와 에너지 구매를 대폭 늘릴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신년사설에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문제를 푸는데 국가적인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다섯째, 중국정부의 변경지역 무역에 대한 다양한 관세혜택 부여와 북한과의 자유무역시장(호시무역시장) 개설에 따른 무역량 증가가 예상된다.
- 중국은 변경소액무역(관세, 부가가치세 50% 감면), 변민호시무역(관세 면제) 등의 다양한 변경무역제도를 운영 중임.
 - 북·중간에 단둥·도문·훈춘 지역에 호시무역시장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어서 양국 접경지역을 통한 무역량 증가가 예상된다.
- 이에 반해 북·중 무역의 제한요인으로는 △국제적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의한 수출제한이 여전히 한 점 △북한(세관)당국 정책의 비일관성과 부패 △북한의 경화결제 능력의 부족 △북한 대중 수출 경쟁력 상품의 부재 △무역자율화 억제정책 등을 들 수 있음.
- 첫째, 작년 핵실험 이후 중국의 추가적 무역제한 조치들은 대부분 해제되었지만, 전략물자 통제체제⁵⁾에 따른 대북 수출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어서 거래품목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최근 중국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기술의 공급원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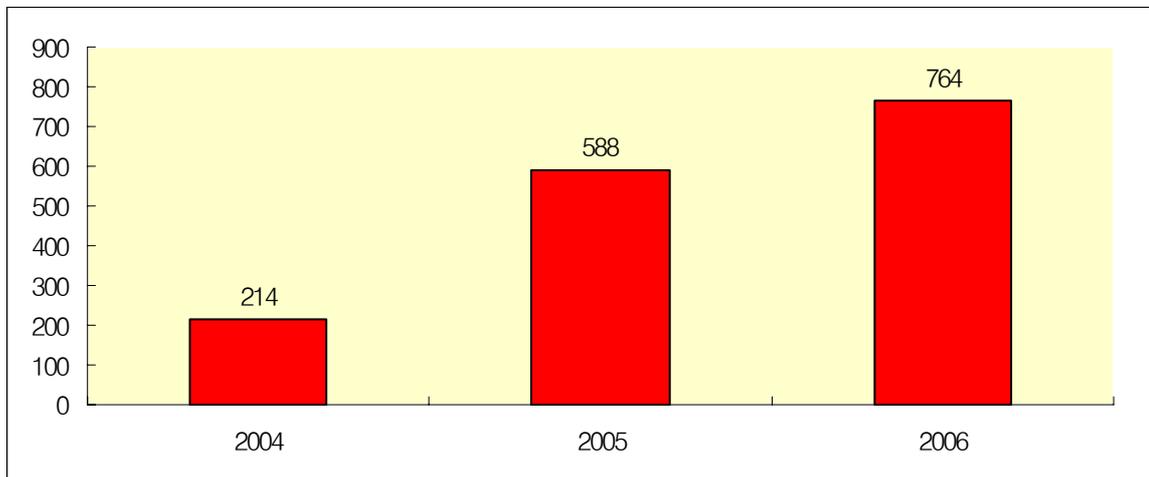
5) WA(Wassenaar Arrangement, 바세나르체제), NSG(Nuclear Suppliers Group, 핵공급국그룹),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수출통제체제), AG(Australia Group, 호주그룹)등 4대 국제통제체제가 있으며, 중국은 이 중 NSG에 2004년 가입했고, MTCR에는 참여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짐(국정원 자료).

내부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기계설비, 전자기기, 운송장비 중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한 대북한 수출제한 조치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있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임.

- 둘째, 북한의 경화결재능력 부족으로 북·중 무역의 많은 부분이 물물교환방식인 구상무역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 무역적자의 심화로 북한의 대중 수입증가가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중국정부의 차관, 무상원조, 남북교역 등으로 무역적자의 일부를 보전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적자는 북한의 외화난을 가중시켜 무역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셋째, 북한의 대중 수출은 무연탄, 철광석, 어패류 등 1차 생산품 위주로 구성되어 경쟁력 있는 대중 수출품이 적어 수출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2004년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가 0.5 이상인 품목은 어패류, 금속공물, 목재, 견, 골동품 등 5개 품목에 불과함.⁶⁾
- 넷째, 북한당국의 일부 품목에 대한 잦은 수출금지 조치와 세관조직의 부패 등은 북·중 무역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올해 1월부터 북한당국은 각 기업의 광산개발에 대한 집중검열을 이유로 납, 아연, 구리 등의 대중 수출을 일방적으로 금지한 바 있음.⁷⁾

6) 무역특화지수가 0 이상 1 이하이면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경제력이 강한 것을 뜻하고, -1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영훈 2005,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7) 『연합뉴스』(2007. 3. 23), 「北, 무분별 광산개발 제동..국가에서 채광권 회수도」.

- 북한세관은 통관과 관련하여 중국 무역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도 많음.
- 다섯째, 대외무역에 있어 각 기업의 자율권을 인정하기보다는 계획과 통제를 우선하는 북한 대외무역관리체제 또한 무역량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8. 북·중 무역의 증가요인 및 제한요인

증가요인	제한요인
대북금융제재 해제 통관검사절차 완화 대북 투자 증가에 따른 설비 도입 의류 위탁가공품의 수출증가 변경무역 우대제도 운영(감세 및 면세 혜택)	대량살상무기 관련 수출제한 여전 북한의 경화결재능력 부족 북한의 대중 수출경쟁력 상품 부재 북한(세관)당국의 정책임의성과 부패 무역자율화 억제정책

나. 투자 및 지원

- 6자회담의 2·13합의에 따라 북핵문제가 원만히 타결될 경우, 중국정부는 단순한 핵 포기에 따른 보상(incentive)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전략까지 고려하여 북한에 에너지 및 연계 인프라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중국지도부의 발언을 종합하면, 북한의 핵 포기에 따른 중국정부의 대북한 보상은 ‘식량’ 과 ‘에너지’ 의 무상지원이라는 기존의 형식과 더불어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형식을 띤 개발원조 차원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북·중 정상회담시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과 북한기업의 투자협력을 고무하고 지원하겠다” 고 언급하여 경제협력을 원조와 교역 중심에서 투자로 확대할 것을 시사함.
- 일본 교도통신은 정상회담 기간 중 중국이 북한에 약 20억 달러의 장기원조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보도한 바 있으며,⁸⁾ 이후 추가보도를 통해 중국이 제11차 5개년계획 기간에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대북 지원을 추진하기로 북한측과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함.⁹⁾
- 홍콩 문화보(文匯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우이 국무원 부총리가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 직전인 2005년 10월 10일 방북하여 북한과 광산개발, 제철공업, 항구개발 등 3대 중공업분야에 개발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보도함.¹⁰⁾

8) 『교도통신』 (2005. 10. 29)

9) 『교도통신』 (2006. 2. 25)

- 중국 대북 투자의 기본방향은 동북3성 진흥전략과 관련된 두 가지 핵심문건인 「동북 老공업 기지의 대외개방 확대실시에 관한 의견」¹¹⁾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1차 5년(2006~10년) 계획 강요」¹²⁾에서 제시된 장기전략하에서 이루어질 것임.
- 두 문건에서 제시된 북·중간 주요 경제협력사업으로는 △두만강지역의 국제협력 강화 △훈춘·나선간 국경경제협력구 건설 △동변도 철도(東邊道鐵路) 건설 촉진과 연계교통 인프라 완비 등임.
- 중국의 북한 인프라 투자는 ‘북한과의 도로·항만·지역 일체화(路港区一体化)’ 라는 전략목표에 따라 북·중 접경간 경제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통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단둥(丹東)~신의주, 지안(集安)~만포, 훈춘(琿春)~나진·선봉 등 접경도시간 연계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이들 지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북·중 당국간 철도, 도로, 다리 건설 연결 등 교통인프라 개발에 대해 논의가 있어왔으나, 소요자금의 배분,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이후 양국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이루어지지 못했음.
 - 그러나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대북 지원에 대한 여지가 확대된 만큼, 그동안 지체되었던 사업들이 활발히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단 중국정부의 접경지역 인프라 투자가 접경지역간 경제 활성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한 전체, 더 나아가 남한과의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염두에 둔 반면, 북한정부의 경제개방은 신의주 특구, 나선특구 등 특정 지역과 그밖의 지역을 최대한 분리시킴으로써 북한체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접경지역 개발을 둘러싼 양국간 이해상충은 중국의 대북 투자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북·중간 주요 연계 인프라 개발사업 현황¹³⁾

① 단둥-신의주 연계 개발: 단둥임항산업원구 건설, 新압록강대교 건설, 비단도 경제특구

- 2005년 8월 중국 단둥시 발전개혁위원회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인프라 건설과 수출가공구 조성 추진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는 新압록강대교(제2압록강대교)의 건설이 포함되어 있음.

10) 『문화보』 (2006. 10. 30)

11) 關於促進東北老工業基地進一步擴大對外開放的實施意見

12)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2006~10年)規劃綱要

13) 김원배 외(2006), 『중국 동북3성 개발이 북·중 접경지역 산업 및 기반시설 개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련 신문자료.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사비 조달 문제와 복핵위기로 계획 자체가 무산위기에 있었으나 6사회담 합의 이후 다시 북중간 교량 건설 문제에 대한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짐.

- 단둥시는 신압록강대교 부근에 단둥변경경제합작구를 발전시켜 임항산업원구(丹東臨港產業園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현지 부지조성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홍콩 『아주주간』(2007. 3. 23)에 따르면, 북한도 압록강하구 비단도에 금융센터 및 경제특구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② 훈춘-나진 연계개발: 훈춘-나선 도로·항만·지역 일체화(路港区一体化)

- 훈춘시는 2003년 11월 「훈춘-나선 도로·항만·지역 일체화」 계획을 제시하고, 같은 해 12월 양 지방정부간 교섭이 시작되어 2004년에 기본합의에 도달, 2005년 9월 협정을 체결하여 2007년 1월 북한이 중앙경제협력관리국의 허가를 얻게 되었음.

- 이에 「훈춘-나선 도로·항만·지역 일체화」 계획은 지린성 정부의 11차 5개년계획(2006~10년)에 포함된 상태이며, 이 사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나진항 개발과 훈춘-나선간 도로 연결 및 확장 사업임.

③ 동변도 철도 건설

- 중국은 동북3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을 따라 라오닝성의 다롄과 헤이룽장성의 수이펀허를 연결하는, 전장 1,380km에 이르는 동부변경도로 및 철도 건설을 계획 중임.

- 동변도 철도는 북한과의 변경무역 중심지인 단둥·투먼·훈춘 등의 세관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들 세관을 이용한 대외개방의 확대, 해외자본 및 기술의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9. 동변도 철도의 북한 국경역 현황

중국 국경역	북한 국경역	연결궤도 (mm)	국경선과의 거리(km)	
			중국 국경역	북한 국경역
단둥(丹東)	신의주	1,435(표준궤)	1.4	1.7
지안(集安)	만포	1,435(표준궤)	7.3	3.8
투먼(圖門)	남양	1,435(표준궤)	2.1	1.3

자료: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철도수송 전략

④ 지안-만포 연계 개발: 국제대교 건설

- 지안시의 장형(張恒) 선전부장은 2006년 7월 중국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북·중 철교 부근에 길이 1km의 8차선 국제대교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에너지부문에서 중국의 대북 투자 및 지원 사업으로는 △경유 무상지원 △발전소 개보수 지원 △기합의된 수력발전소 공동건설 적극 추진 등을 예상해볼 수 있음.
- 우선 지난 3월 15일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회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핵 폐기 초기조치 이행 이후 다음 단계에서 중유 지원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또한 중국은 북한의 근본적인 전력부족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수력발전소 개보수 및 이미 합의된 수력발전소 공동건설계획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큼.
 - 북한과 중국은 공동으로 압록강 수력발전회사를 설립하여 압록강 수계에 수풍, 태평만, 운봉, 위원 등 4개의 수력발전소를 공동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생산된 전력을 50:50으로 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국은 북·중 접경지대 공동관리 발전소를 우선하여 설비 개보수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북한과 중국은 2006년 5월 압록강 중류 립토, 문악 두 곳에 총 설비용량 8.4만kW급 수력발전소를 공동건설하기로 합의하였음.
- 북핵사태 이전까지 급증세를 보였던 중국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도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다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투자는 광산개발에 집중될 것임.
- 2005년까지 투자사례를 분석한 결과 광산개발분야의 투자건수는 7건 정도에 불과했지만, 투자금액으로는 전체 투자액의 70% 이상을 차지하였음.¹⁴⁾

3. 시사점

- 최근 전개되고 있는 북·중 경제관계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음.
- 첫째, 북·중 경제관계도 과거와는 달리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로 촉발되었던 1차 북핵위기 당시 북·중 무역은 전년대비 29.2%의 증가를 보여 북핵문제 악화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음.

14) Kotra(2006), 「최근 북·중관계전망」, 기획조사 06-077.

-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중 교역은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성장률이 2~3개월 사이에 거의 0%로 떨어졌고 대북 투자도 전무해지는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가 북핵의 진전 상황 여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북·중 경제관계가 과거와 달리 북핵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은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나, 반대로 북핵 해결이 진전될 때 북·중 경제관계가 급격히 증대되는 것은 두 나라의 혈맹적 유대관계가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 둘째, 북·중 경제관계는 중국의 중앙정부, 동북3성 지방정부, 기업 등 상이한 층위의 주체들의 각기 상이한 목표와 전략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상을 보임.
- 중국 중앙정부는 북핵을 억제하고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지원정책에 역점을 둬.
- 중국 동북3성 지방정부는 지방경제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변경무역 확대와 연계인프라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민간기업은 철저한 상업적 수익을 목적으로 지하자원 개발분야에 투자를 집중함.
- 셋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만성적인 성격을 띠면서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음.
-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4년 48.5%에서 2005년 52.6%로 증가하여 최초로 50%를 넘어섰음.¹⁵⁾
- 북한의 산업생산은 현재 중국에서 원자재와 에너지, 설비와 부품을 공급해야만 돌아가는 만성적 의존구조로 고착되고 있음.
- 한편, 한국은행의 발표¹⁶⁾에 의하면 북한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산품의 중국산 비중은 70%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KIEP가 탈북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¹⁷⁾에서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원자재와 설비 중 중국산의 비중이 80% 이상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15) 남북교역을 제외한 수치임.

16) 한국은행(2007),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17) 조명철 외(2005),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넷째,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를 남북 경제관계로 대체하기 위한 적극적 대북 경제정책 시행이 필요함.
- 북·중 경제협력의 급격한 증가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과 한반도 통일경제 구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음.
 - 북한이 전면적인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지원과 교류 확대는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북한의 산업개발이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남북 산업표준화를 비롯한 남북경협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북한내 유망한 투자대상들에 대한 개발권이 중국측으로 넘어감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고려한 개발정책 수립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
- 따라서 북핵 해결과정에서 북·중 경제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을 점진적으로 남북 경제관계로 대체하고, 중국의 대북 지원과 경제교류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며 △한반도의 경제적 통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통행·통신·통관 제도 개선을 통해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경협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한간 산업협력을 확대하여 북한의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북·중 접경지대 개발사업의 경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중간 협력사업이 아닌 남·북·중의 3각 협력을 통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